2024 통일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신통일담론 형성의 고려사항 및 주요 내용 연구

2024.7.13.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통일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 출 문

통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통일부 연구용역 『신통일담론 형성의 고려사항 및 주요 내용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7.13

책임연구원 : 성기영 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변상정 수석연구위원
김현우 책임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 차

요약 1

제1장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 9

제2장 신통일담론 수립시 고려사항 14

가. 신통일담론 수립 배경 및 필요성 · 14

나. 기존 통일방안 및 남북합의서와의 관계 · 31

제3장 신통일담론의 형식 및 주요 내용 38

가. 신통일담론 발표 형식 · 38

나. 신통일담론의 주요 내용 · 42

제4장 신통일담론에 따른 구체적 정책방향 및 사업 제안 58

참고문헌 73

표 목차

<표1> 2018-2023 연령대별 ‘통일 필요성’ 응답 비율 24

<표2>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통일’ 관련 조항 36

그림 목차

<그림1> 신통일담론 개념도 4

<그림2> 2014-2022 연령대별 '통일 필요성' 응답 비율 24

<그림3> 신통일담론의 수립 및 이행 원칙 42

<그림4> 신통일담론의 목표 및 핵심요소 44

<그림5> 신통일담론 기반 통일정책 추진 방향 50

요 약

제1장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

○ 김정은 정권의 평화통일 부인과 민족 개념 폐기로 인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한반도 유일의 평화통일 구상 및 방안으로 존재

- ‘통일’과 ‘민족’은 특정 정권이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 ‘통일’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활용

○ 북한의 ‘2개 국가’ 선언과 통일노선 전환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담론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작업에 북한의 평화통일 정책 폐기 선언과 헌법 개정 움직임 이후 정세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해석할 필요성 대두

- 통일의 미래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하게 구현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는 신통일담론이 필요

제2장 신통일담론 수립 시 고려사항

가. 신통일담론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신통일담론 제기 배경

ㅇ (국제정세 배경) 한미일 3국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지지, 러북-북중 밀착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불안정성 심화

ㅇ (한반도적 배경)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을 위한 의지, 북한의 '2개 국가론' 등 통일노선 전환 선포

ㅇ (대내적 배경) 통일환경 변화로 인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용성 재검토, 분단상태의 지속과 세대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의 위축

(2)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ㅇ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선포에 따른 통일환경 변화 가능성

ㅇ 기존 통일담론의 효용성과 지속성에 대한 성찰적 검토

ㅇ 남북관계 주도 통일기반 조성 작업의 한계

ㅇ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중요성 증대

ㅇ 통일 준비를 위한 동반자로서 북한주민들의 역할을 재조명

나. 기존 통일방안 및 남북합의서와의 관계

ㅇ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되 이를 재조명함으로써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인류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인권 가치가 내재된 통일담론을 지향

ㅇ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되 북한의 무력통일 노선에 대응하는 평화통일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

제3장 신통일담론의 형식 및 주요 내용

가. 신통일담론 발표 형식

○ 한반도 통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언’, 또는 ‘구상 발표’ 형태로 신통일담론에 담고, 남북한 정부(주민), 국제사회에 제안(호소)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표 형식을 디자인

- 신통일담론은 ‘구상’과 ‘선언’ 및 ‘제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대제목은 ‘구상’ 또는 ‘선언’, 소제목에는 ‘제안’을 담는 것이 타당

※ 예)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위한 특별선언 ; 남북한과 국제사회에 제안합니다”

나. 신통일담론의 주요 내용

○ 수립 및 이행 원칙

① (균형적 통일담론) 대북전략과 통일전략의 균형, 대북 억제력 강화와 평화공존의 균형, 민족 프레임과 국제환경 프레임의 균형, 규범적 가치와 실질적 이익의 균형

② (현실적 통일담론) ‘당위’로서의 통일을 넘어 ‘현실’로서의 통일 준비, 통일방안이나 로드맵 중심 접근 지양, 통일 ‘이전’ 통합과 통일 ‘이후’의 통합 병행 접근

③ (탄력적 통일담론) 통일유형별 비용/편익 지속적 업데이트, 통일 이전 재정능력 추이와 통일 이후 복지 시나리오 변화 반영, 통일 비용 위주 접근 지양과 중장기적 편익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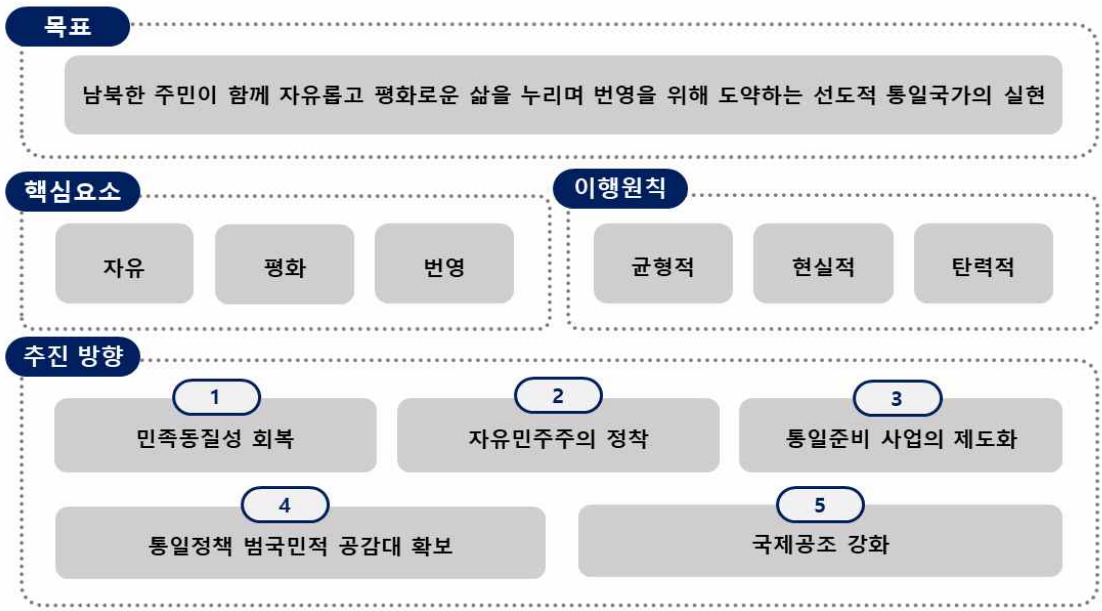
○ 통일의 목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번영을 위해 도약하는 선도적 통일국가의 실현”

○ 신통일담론 기반 통일정책 추진 방향

① 민족동질성 회복을 강조하고 단일국가 지향을 재확인
② 통일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정착 노력 경주
③ 실질적 통일준비 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통일대비 역량 강화
④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
⑤ 통일환경 개선과 통일준비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그림1> 신통일담론 개념도



제4장 신통일담론에 따른 구체적 정책방향 및 사업 제안

○ 신통일담론 확산을 위한 민관 공동 노력 경주

-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로 승격하여 (가칭)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칭) 통일준비지원법을 제정

- (가칭) 통일준비지원법 제정시 국회에서 3~5년 단위로 통일준비기본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이행

- 22대 국회 임기 내 통일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목표로 신통일담론에 대한 대국회 설명과 협조체제를 강화

- 여야 출신 前職 국회의장을 공동대표로, 초당파적 성격을 갖는 (가칭) 통일미래포럼을 구성해 통일특위 구성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

ㅇ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민생 개선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

- 국내외 통일 관련 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후원을 확대하고 북한인권 해외 행사 개최 시 재외공관을 통해 편의를 제공

- 북한주민의 정치적 자유권과 경제적 생존권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의 1.5 트랙 협의체 창설

- 영국, 독일 등 유럽 내 북한 수교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스웨덴, 핀란드 등 중재외교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

ㅇ 개방과 소통을 위한 남북대화 추진

- 자연재난 요인에 따른 인도적 조치,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시 확전 방지 등을 위한 남북 간 연락채널의 복원을 북한측에 요구

-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 중재 국가들과의 양자외교 과정에서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을 강조하고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을 설득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서는 북한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을 강화

- 농업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북한 주민을 위한 민생 현안, 기후 변화 대응과 삼림 황폐화 방지 등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대화 제의

- 언론, 방송, 출판, 학술 등 지식정보 분야 남북교류를 통해 동질성 회복 노력을 경주하고, 공통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도록 유도

o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속적 개발

- '북한이탈주민의 날' 취지 및 각종 기념행사 내용이 중북 국경 지역과 한국 위성TV 시청이 가능한 군사분계선 지역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 통일부 및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 하나원, 북한인권기록센터), 민주평통 등 통일업무 관련 공직에 탈북민 임용시 인센티브 부여

-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에서 청년 탈북민 채용시 특별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통일준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90년대 중반 급증한 탈북민들의 현재 연령대를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노후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

ㅇ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에 통일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과장, 국장 승진자를 대상으로 통일준비 사업에 대한 의식 함양

- 공공기관 통일교육 의무 시수를 확대하고 하위 직급자 위주의 수강 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참석 유도 방안을 강구

- 통일준비 사업의 복합성을 고려해 각 부처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융합적 관점의 커리큘럼을 개발

- 서울지역 통일관을 3~4개소 추가 지정하여 인구 및 통일교육 수요 대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추가 설치 장소는 일반시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전쟁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서울 소재 주요시설 내 일부를 통일관 또는 통일 관련 전시 시설로 지정,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ㅇ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외교, 지식외교, 정책공공외교의 다양한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 구성물로서 통일외교 컨텐츠를 재구성

- 미중일러 및 독일 등 5개국 대사관에만 주재하고 있는 통일안보관을 증원하여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와 유엔대표부, 유럽연합, 아세안 등을 상대로 통일외교 기반 구축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진흥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한국학 거

점대학의 한국학 교원임용이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에 통일 분야 전문가와 통일 관련 커리큘럼을 포함

- 국제교류재단(KF)이 시행하는 ‘해외 한국학 강좌’에 △이산가족 △남북한 언어 및 문화 비교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통일을 위한 노력 등 통일 관련 강좌 설치를 의무화

- 국립통일교육원 시행 ‘글로벌 통일교육’ 대상을 해외 전문가, 신진학자, 주한 유학생에서 전현직 외교관과 국회의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종사자 등으로 확대

신통일담론 형성의 고려사항 및 주요 내용 연구

제1장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평가

o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기초로 김영삼 정부가 1994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 지난 30년간 여야 정권교체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일담론의 기본 전제로 수용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30년 간 국제질서의 전환과 남북한의 이질성 심화, 북한 체제 내부의 변화, 통일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계승, 발전, 수정, 보완, 등에 대한 다양한 담론 형성

- 역대 정부는 물론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새로운 통일구상(방안)이나 기존 통일방안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자체는 유지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과 남북한이 별개의 유엔 회원국인 국제법상의 현실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반영

o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보수 정부 집권 당시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치의 대표적 사례[1)]

-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에게 냉전 종식에 따라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통일방안 작성을 지시

※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방안은 행정부만의 일이 아닌 국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야권 3당의 총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4당 합의 도출을 강조

- 제6공화국 출범 2개월 후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4.26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전체 의석 299석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25석에 그쳤고, 야권 3당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이 164석을 차지해 여소야대 구도 형성

- 국회 개원 직후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제2야당 통일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 4당이 참여하는 ‘통일특별위원회’를 구성

- 노태우 정부 임기 중 ① 통일특위 내 여야 4당 간사 중심 상시적 협의 ② 통일원 제출 통일방안에 대한 공청회 ③ 통일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 범국민적 합의를 거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탄생

-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광복 49주년 경축사를 통해 자주, 평화, 민주 등 3대 통일원칙을 기반으로 화해협력 단계와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

ㅇ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 개헌(9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헌법 조문(제4조)에 포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정신을 반영[2)]

1) 홍민 외,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183-185.
2) 성기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편 방향: 주요 쟁점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3년 10월

-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규정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자유와 평등을 기본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제시 [3)]

- 통일의 절차와 이행 과정 및 통일 이후 국가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을 강조[4)]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을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1991)의 정신을 계승

o 과거 북한의 최고지도자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 간에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항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

-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하나의 민족이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 남북 간 공감대 유지

- 최근 김정은의 ‘2개 국가론’ 제기와 평화통일 부인 주장은 향후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 남북합의서의 통일정책 관련 조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2개 국가론’ 주장이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현실을 외면하고 분단의 장기화와 고착화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지되어 온 역사적 정당성을 재확인할 필요

---

3) 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검색일: 2024년 7월 4일).

4)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5), pp.60-67.

○ 김정은 정권의 평화통일 부인과 민족 개념 폐기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반도 유일의 평화통일 구상 및 방안으로 존재

- ‘통일’과 ‘민족’은 특정 정권이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 뿐더러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해 ‘통일’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활용

- ‘통일’과 ‘민족’을 거부한 김정은 정권과 달리 북한주민은 통일의 동반자이며, 미래 한반도 통일국가의 구성원

- 김정은 정권의 반역사적·반통일적·반민족적 인식과 행태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킬 필요

○ 북한의 ‘2개 국가’ 선언과 통일노선 전환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담론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 작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5)]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전제하고 있는 ‘통일지향적 한시적 공존관계’에 대해 북한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흡수통일을 위한 책략으로 비난하고 나올 가능성 존재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업그레이드 작업에 북한의 평화통일 정책 폐기 선언과 헌법 개정 움직임 이후 정세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북한의 평화통일 정책 폐기 선언과 헌법 개정 결과 예상되는 ‘2개 국가’ 담론 주장이 우리 사회 통일 인식의 기반을 허물고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부추길 것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

5) 성기영,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이후 대한민국 신통일담론의 모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통권 227호 (2023), p.2.

-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을 대남전략과 전술 변화 차원을 뛰어넘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민국 역시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을 뛰어넘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

o 국제질서와 세계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보편적 기준과 인권 존중, 삼권 분립, 권위주의 타파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재해석할 필요성 대두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자유민주주의를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제4조(통일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

※ 김영삼 前 대통령은 1994년 광복절 49주년 경축사를 통해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 철학은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3단계 통일방안이라는 로드맵 중심의 접근 속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는 충분히 공론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통일의 미래상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명확하게 구현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한주민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업그레이드하는 신통일담론이 필요

o 신통일담론은 형성 과정과 절차, 방향과 내용 모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거나 △국민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시민사회의 이념적 분열 현실을 고려할

때, 집권세력이 일방적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또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 박근혜 정부가 시도했던 '통일헌장' 제정은 좌초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통일국민협약'도 새로운 통일담론 창출에 실패

-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통일담론 형성작업을 추진할 경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마저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통일장전'으로서 권위를 잃게 될 우려

제2장 신통일담론 수립 시 고려사항

가. 신통일담론 수립 배경 및 필요성

(1) 신통일담론의 제기 배경

■ 국제정세 배경

○ 한미일 3국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지지

- 2023년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원칙'에서 미일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

※ 다자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협력할 것임을 명백히 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

- 한미일 3국이 공감하고 지지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은 자유, 인권, 평화를 실현하는 통일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 형성에 디딤돌로 작용

- 북한의 비핵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향후 한국의 양자 및 다자 정상외교에서 공동성명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동시에 필수 항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필요

※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동맹의 다방향 격자(multi-directional lattice-like) 구조화 흐름에 따라 호주, 필리핀, 인도 등이 참여하는 소다자 대화와 정상급 외교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전파

- 한미일 3국의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지지에도 불구하고 3각 공조를 둘러싼 정책 우선순위는 상이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구상하는 통일 시나리오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

-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탐지·추적·요격 능력 강화를,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동조화를 통한 중러 부상 억제를, 일본은 미일동맹 내 역할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해양강국 부상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상정[6)]

※ 일본의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은 '일본 국민의 존립이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가능케 하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관련 국내적 논란을 예고

- 한미일 3국 정상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선언에도 평화적 협상에 의한 단계별 통일 시나리오, 또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6) 성기영,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2년 9월 8일, pp.4-10.

충돌 발생시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적 대화는 부재

※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 개념계획 5029를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거나 중러북 밀착에 대응하는 전술 개념을 도입하는 통일 구상 필요

○ 러북-북중 밀착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불안정성 심화

- 2024년 6월 푸틴-김정은 정상회담과 러북 신조약 체결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발생시 미군이 개입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의 확전 가능성 증대

※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 제2조는 "조약당사국 일방이 어느 국가나 수개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구소련 당시 한반도 작전계획에 기반하여 러시아는 동해지역의 영공·영해 중심, 중국은 서해지역의 영공·영해 중심으로 군사적 개입 시나리오 예상

※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양국 순방 당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공동진입한 후 러시아측 촬영 영상을 중국이 공개한 바 있음

-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중러 양국의 합동군사훈련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와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해역으로도 확대[7)]

7) 김계화, "우크라전 서방 압박에도... 작년 중러 군사훈련 20년 사이 최다,"『연합뉴스』 2023년 7월 17일.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북 밀착외교 강화 과정에서 김정은에게 중러북 합동군사훈련을 제안한 바 있어 향후 중국의 태도 변화와 북한의 여건 성숙에 따라서는 3자훈련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8)]

-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비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무력화 등으로 북한의 핵능력 기반 지정학적 생존전략을 가능케하는 외교적 플랫폼도 제공

- 러북 동맹 부활과 중북관계의 안정적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중러북 3국 간 군사적 공조의 일체성과 내구성은 한미일 군사협력의 상호운용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

- 중러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 합동군사훈련에 따른 통합방어 능력 수준, 상호 교역 및 인적 교류 현황 등을 감안할 때 3국 간 외교, 군사, 경제적 공조의 고도화 수준과 지속가능성도 제한적

- 러시아와 중국은 신냉전 국면에서 지정학적 공조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을 활용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데는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

-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남북 간 국경선을 선포하고 나설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의 '2개 국가' 독트린 지지 여부를 놓고 고심스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한국 정부는 북한의 '2개 국가' 선포와 헌법 개정 등 남북관계에 군사적 긴장을 예고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현상 변경 시도라는 점을 중러 양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

8) 신규진·신나리, "[단독] "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한미일 밀착엔 경고메시지," 『동아일보』, 2023년 9월 5일.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김정은의 현상 변경 시도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메시지를 신통일담론에 포함할 긴급할 필요성 존재

■ 한반도적 배경

○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을 위한 의지

-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한 의지를 표명

- 3.1운동을 자유주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독립투쟁으로 재조명하고 한민족 모두가 일제 강점의 억압을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향한 열망이 집약된 사회운동으로 정의

- 3.1정신의 완성은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확장을 통해 2600만 북한주민을 포함한 한민족 전체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통일국가를 형성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북한주민들의 생활 수준 개선과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일을 위한 노력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매김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을 계기로 기존의 통일방안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 경주

○ 북한의 '2개 국가론' 등 통일노선 전환 선포

- 북한은 2023년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교전중인 2개의 국가’ 관계로 정의하고 당 통일전선부 등 대남사업 부서와 조평통 등 대남기구를 철폐

-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민족 기반 통일노선을 부인하고 ‘한반도 유사시 영토 완정’ 등 무력통일 시나리오를 제외한 기존 통일정책도 전면 폐기

-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은 핵무력정책법 제정과 핵보유 헌법 명기 등 일련의 조치 완성 이후 남한에 대한 핵타격 위협에 걸림돌이 되는 ‘민족’ 담론의 제거 목적 내포

- ‘우리민족끼리’ 담론을 벗어나 남한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과 번영을 강조함으로써 ‘부강조국’ 건설을 통한 자긍심을 유도함으로써 김정은 우상화 기반 체제 공고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김정은은 6.15, 10.4,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등 과거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체제를 뒷받침할 자립경제 건설과 자강력 확보에 별다른 이득이 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

-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은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미래구상 수립 작업에 맞대응하고 대북정책에 ‘힘빼기’ 차원으로도 해석 가능하며 이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 상 ‘통일지향 특수관계’를 선제적으로 부인

- 김정은 체제 통치 수단이자 정책목표로서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부각하기 위해서도 별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김정은은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2021)에서 이미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고 언급

- 북한판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한 드라마와 영화 등 K-컨텐츠의 유입이 위험 수위에 육박해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남북 교류협력 가능성을 원천 봉쇄

※ 북한의 반동문화사상배격법(2020)은 이미 '괴뢰'(남한) 영상물과 인쇄물 시청, 유포 등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27조)을 명시함으로써 '적대국"(미국 등) 사상문화 전파(5년 이하 노동교화형, 28조)에 비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

- 북한이 △'민족' 개념 부인, △'교전 중 국가관계' 선포, △대남사업 기구 철폐 등을 통해 통일담론을 해체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포석인 동시에, 중러 양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분단의 영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지작업일 개연성 내포

-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대적선언과 통일노선 전환은 고려연방제식 통일의 포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남북한 체제 경쟁의 완패로 인한 흡수통일의 위기감을 반영

※ 1960년대 이후 과거 동독의 통일노선 포기와 동서독 '두 국가' 관계 설정 시도가 결국 동서독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동독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에 유념

-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은 통일 목표의 포기가 아니라 분단 이후 남북이 합의했던 평화통일 목표에 대한 전면 부정인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영토 완정'을 내세운 북한식 무력 흡수통일 독트린의 선포[9)]

※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

9) 성기영,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이후 대한민국 신통일담론의 모색,"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전략보고」2024년 6월, pp.1-4.

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

- 북한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수용하면 한반도 유사시 북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개입의 근거를 상실

※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자위권 범위를 벗어난 군사 개입 불가

- 남북이 합의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북한의 자립 능력이 상실될 경우 제3국에 앞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안정화 작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할 수 있음

- 민족동질성과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북한 주장의 반민족적 성격과 몰역사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담론이 절실한 시점

■ 대내적 배경

o 통일환경 변화로 인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효용성 재검토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사회주의 체제 몰락과 냉전의 종식을 국제적 배경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한반도적 배경으로, 민주화의 진전과 여야 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국내적 배경으로 탄생

- 동서독 통일과 동시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상승

-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의 단극 지배체제 공고화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완전 승리

를 선언한 ‘역사의 종언’ 담론 부상

- 세계적 차원의 탈냉전 분위기, 남북한 체제대결의 종식, 김일성 사망 등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우호적인 국내외 환경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의 기반으로 작용

- 이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장 진전, 남북간 경제적 격차 심화, 민족개념의 변화 및 다문화 사회의 도래, 국민 통일의식 변화 등에 따라 발전적 진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0]

- 북한주민의 인권 현실에 대한 탈북민들의 증언이 공개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내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통일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부상

- 박근혜 정부 시기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비전과 로드맵 마련을 위해 ‘통일헌장 TF’ 와 ‘통일방안 TF’를 운영하여 기존 통일방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11]

-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북·통일정책 공약을 통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천명[12]

- 2023년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민족 개념 철폐, 대남사업 기구 폐지 등에 나섬에 따라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 구성의 필요성 제기

---

10)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와 통일 1』, pp.174-182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 김상범·김종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pp.168-176 ; 고유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12), pp.259-273

11)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 백서』 pp.225-227.

12) 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2022년)

○ 분단상태의 지속과 세대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의 위축

- 분단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남북 간 갈등구조의 고착화, 남북 간 교류협력 창구 단절 상태의 지속, 북한의 핵무장, 김정은 체제의 인권 및 사상 탄압 등에 따라 국민들 내부에서도 통일논의 외면 현상이 만연

- 학술적 영역에서도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강조하거나 2개 국가론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제관계에 부합하는 남북관계 담론이 등장[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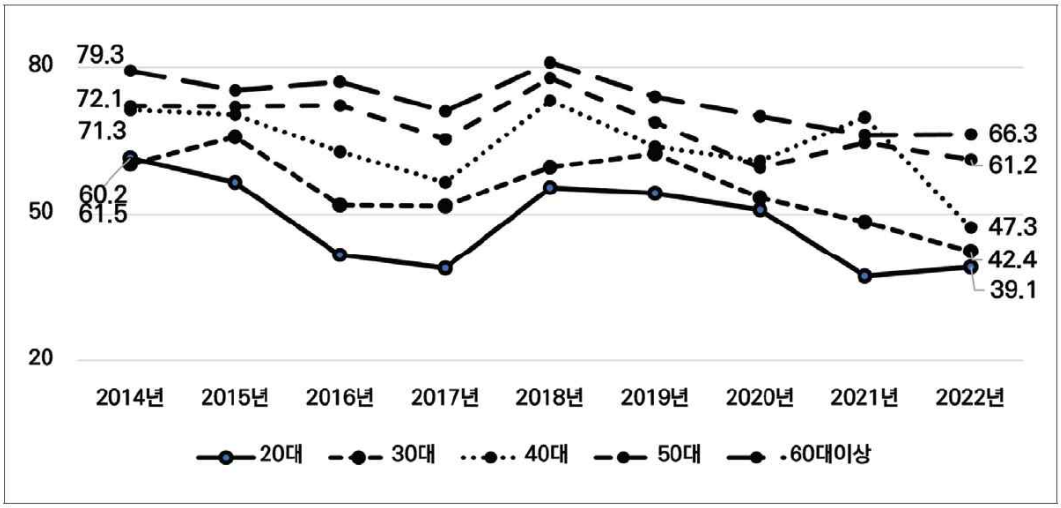
- 청년세대의 국제경험 확대, 미디어 환경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해 민족 중심 통일논의에 대한 설득력이 줄어들고 국제적 보편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관계 논리에 대한 소구력이 증진됨에 따라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KINU 통일의식 조사 2022’(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4년 20대 61.5%, 30대 60.2%에서 2022년 20대 39.1%, 30대 42.4%로 하락 (전체 응답자의 ‘통일 필요’ 의견은 2014년 69.3%에서 2022년 53.4%로 하락)

13) 김계동,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 대북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 명인문화사, 2023)

<그림2> 2014-2022 연령대별 '통일 필요성' 응답 비율

(단위: %)



출처: KINU 통일의식 조사 2022, p.39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19~29세의 41.2%, 30대의 35%가 '통일은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 (전체 응답자 중 '통일 불필요' 의견은 29.8%)

<표1> 2018-2023 연령대별 '통일 필요성' 응답 비율 (단위: %)

연령대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9~29세	13.3	14.4	7.6	5.0	6.1	7.3	40.8	26.7	27.7	22.8	21.7	20.9	28.3	33.7	29.5	29.2	32.5	30.6
30대	17.3	11.7	16.8	9.6	7.3	8.5	35.6	26.5	26.2	31.3	26.7	25.5	27.4	36.9	26.2	24.5	33.8	31.0
40대	23.2	21.7	23.0	16.5	13.4	9.2	35.4	32.3	35.9	30.0	36.9	33.1	26.4	27.0	21.8	29.6	24.3	25.9
50대	27.2	25.9	28.0	15.1	18.6	17.7	42.2	36.1	34.9	31.8	31.8	34.2	16.0	21.0	18.4	26.4	30.3	22.7
60대 이상	24.6	25.1	26.9	20.6	23.8	28.1	37.5	41.7	33.6	36.4	37.4	27.5	23.4	15.6	18.2	21.0	18.4	23.7

연령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9	'20	'21	'22	'23	'18	'19	'20	'21	'22	'23
19~29세	14.0	17.6	28.6	36.1	29.0	32.5	3.6	7.7	6.7	6.8	10.6	8.7
30대	17.5	21.5	23.8	28.8	24.2	28.0	2.3	3.4	7.0	5.8	8.1	7.0
40대	13.8	14.4	16.5	20.2	20.6	25.5	1.1	4.6	2.8	3.7	4.9	6.3
50대	13.3	14.6	13.0	22.5	16.3	20.8	1.2	2.5	5.8	4.3	3.0	4.6
60대 이상	9.3	11.4	18.6	18.0	16.5	17.6	5.2	6.2	2.8	4.0	3.9	3.1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의식 조사, p.33

- 청년 세대는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다른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상황에서 민족주의 기반 통일담론의 효용성에 의문 제기

※ 2021년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 밀레니얼세대의 74.1%, IMF세대의 68.3%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해 전체 국민의 북한 무관심 응답률(61%)을 상회[14)]

- 민족 정서에 기반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약화하는 반면, 다문화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통일의식을 이민에 대한 인식의 틀로 접근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반(反)이민 정서 설명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위적 측면과 편익에 근거한 통일의식 모두에서 유의미한 설명을 제시한 반면, 단일민족 의식에 근거한 모형은 통일의 편익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노출[15)]

- MZ세대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반응하는 대신 평화적 공존을 더욱 설득력 있는 통일의 개념으로 이해[16)]

- 통일 비용보다 통일의 기회 요인을 강조하고 개인과 국가의 이익 보장이라는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통일담론은 청년들에게 북한을 '제한된 자원을 약탈하는 타자'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도 존재

(2)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선포에 따른 통일환경 변화 가능성

- 김정은의 '2개 국가론' 선포와 통일 부인 정책 드라이브는 김일

14) 이상신·민태은·윤광일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13.
15) 정승호·조용신·김규철, "반이민 정서 모형을 이용한 부정적 통일의식 분석," 『통일과 평화』, 제14권 제2호, 2022년, p.5.
16)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년, p.96.

성, 김정일 시대 민족주의 통치노선과 조국통일 이데올로기를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남북 간에는 새로운 통일담론전(戰)을 야기할 가능성

-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헌법 개정, 2026년 9차 당대회를 통한 당 규약 개정 등 향후 정치일정을 통해 통일노선 전환에 따른 공세적 대남 전략전술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통일전략 변화의 배경을 재해석하고 김정은 통일노선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이 불가피

- 김일성은 남한에서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 퇴진 등 정치적 혼란과 북한의 경제적 우위에 대한 자신감 속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국가 창설 이전 과도기적 체제로서 연방제를 제안

- 김일성의 연방제는 남북한 각자의 정치제도를 인정하고 외교 및 군사적 주권은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최고민족위원회에 정부대표들을 보내서 (정치, 군사분야를 제외한) 경제와 문화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연방시스템(federation) 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근접

-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 3대 원칙에 합의

- 1973년 ‘조국통일 5대 강령’을 통해 ‘과도적 방안’이 아닌 완성형 통일국가로서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후 유엔 가입을 주장하고 남과 북에 2개의 지역자치정부를 두고 ‘최고민족연방회의’라는 통일연방정부를 제안

※ 북한은 당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제안을 ‘분단 영구화 및 분열주의 책동’으로 규정하고 ‘조선은 하나다’와 같은 단일민족 및 통일국가 이데올로기를 전파

- 1980년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기존 연방제 통일방안을 구체화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권 퇴진,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

- 소련의 멸망, 동유럽 몰락, 독일 통일, 한중·한소 수교 등 통일환경의 급변 속에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느슨한 연방제’를 주장

※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완성형 통일방안에서 ‘느슨한 연방제’ 주장을 통해 잠정적, 단계적 통일방안으로 선회하면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두 개의 제도 공존을 강조

- 김정일 시대 들어서는 기존에 북한이 주장했던 통일방안 3개(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를 묶어서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명명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선언 2항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공통점을 확인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민족’ 기반 통일담론을 ‘국가’ 담론으로 대체하기 위해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앞세우고 평양 표준시를 도입하는 등 남북한의 독자적 국가성을 강조

※ 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규약 서문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표현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17)]

- ‘하나의 조선’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선대 지도자의 유훈을 부정하는 북한의 평화통일 부정과 민족 개념 폐기는 북한 내에서도 정치적 논란을 촉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이 불가피[18)]

- 남북 간 예상되는 통일담론전(戰)에 대비하여 우리의 통일담론을 재정비하고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

o 기존 통일담론의 효용성과 지속성에 대한 성찰적 검토

- 분단 이후 통일담론은 북진통일론, 민족주의통일론, 중립화통일론, 민족화해론, 민족공동체통일론,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사실상의(de facto) 통일’론, 북한민주화론, 북한해방론, 북한국제화론, 선진화통일론, 통일대박론 등 다양한 형태로 명멸을 반복

-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보편적 가치를 통일의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

- 보수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통일담론의 구성과 실현에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대북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현실성 획득에 실패

- 진보정부는 통일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 통일론이라는 입장 속에서 대북 관여정책 자체를 통일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기능주의적 오류를 반복

- 국제질서의 신냉전화, 정치·경제·군사 복합갈등의 출현, 다자주의의 약화, 가치외교의 부상, 동북아 지정학 질서의 진영화, 김정은

17) 이제훈, “[단독]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사실상 폐기,” 『한겨레』 2021년 7월 1일.
18) 조한범, “새로운 통일 비전 배경과 추진 전략,” 통일정책포럼 발표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24년 3월 20일), pp.14-15.

체제의 폭주, 북핵문제의 고착화 등 국제 및 지역 질서의 대전환 국면에 부합하는 신통일담론이 절실

-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통일만능론이나 통일회의론을 극복할 수 있는 신통일담론은 기존 통일담론이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을 찾는 작업으로부터 출발

○ 남북관계 주도 통일기반 조성 작업의 한계

-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위협, 인권 탄압 등을 청산하고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통일 미래상은 남북관계 차원만으로는 해결 난망

- 역대 정부 중 가장 호혜적이고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적 선언'을 공표한 김정은 체제가 단기간 내에 한국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

- '담대한 구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재개의 모멘텀 회복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 평화의 공공재적 요소라는 담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필요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중요성 증대

-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의 지정학적 긴장은 한반도 통일의 시기, 방식, 통일 이후 미래상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로 작용

- 미중일러 등 주변 이해당사국들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상이한 전략적 고려

- 주변 이해당사국들은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에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에 유리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對한반도 외교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

-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에 부합하도록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설득하는 통일지향 외교 강화 필요성

○ 통일 준비를 위한 동반자로서 북한주민들의 역할을 재조명

- 한반도 통일은 궁극적으로 통일의 또다른 주체이자 당사자인 북한주민들의 의지와 역할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사실을 강조

※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는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도 한반도의 자유, 평화,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동반자이자 주역이라는 사실을 강조[19)]

- 북한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이 원하는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반영

- 북한 내 엘리트와 주민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 심리전 필요성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지지 확보도 필요

- 북한주민들 스스로가 수령독재의 공포 통치와 전세계 최악의 인권유린행위의 본질을 인식하고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

- 북한주민들의 통일 의지를 북돋우고 통일 과정에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김씨 일가 3대 세습의 본질과 북한 내 인권 현실에 대한 자각을 유도하는 새로운 통일담론 마련이 시급

19) 정성윤, “3.1절 105주년 기념사의 평가와 후속 조치,” 통일정책포럼 발표문 (서울, 통일연구원, 2024년 3월 20일), p.2.

- 신통일담론은 북한 사회 내부에도 전파되어 당정 고위층과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자유와 인권 증진의 촉매제로 작용

- 우리 정부의 신통일담론이 통일·대북정책의 다양한 수단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북한 내부에 알려질 경우 북한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계기를 제공

-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에 따른 기구 개편의 결과로 '무직자'로 전락한 대남사업 종사자들의 반(反)김정은 정서를 확산시키는 계기 제공

※ 대남사업 기구 폐지 이후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기능이 대남공작 및 심리전 중심으로 재편되고 대남사업 담당 인원의 일부만이 외무성으로 흡수된 것으로 볼 때 대기발령(비배치) 상태의 인원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20]

나. 기존 통일방안 및 남북합의서와의 관계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원칙을 포괄적으로 계승하되 이를 재조명함으로써 정치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인류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인권 가치가 내재된 통일담론을 지향

- 1994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당시 △통일 이행 과정, △절차, △통일국가 미래상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을 강조[21]

- 통일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하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

20) 신규진, "[단독] "'노동당 10국'으로 이름 바뀐 통전부 북 내부선 '대적지도국' 노골적 별칭" 『동아일보』 2024년 5월 24일,
21)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5), pp.60-67.

으로 삼권분립, 법치주의, 의회제도, 시장경제, 시민사회 등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규정[22)]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정신은 헌법 4조에서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체로 부합[23)]

※ 단,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만을 강조할 것인지, 의회 및 선거제도, 삼권분립 등 정치제도적 요인까지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필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이라는 목표는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여야합의를 통해 추진된 직선제(9차) 개헌에서 헌법 조문에 포함

※ '평화통일' 표현이 대한민국 헌법에 최초로 포함된 것은 1972년 7차 개헌이었으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여 대통령 간접선거를 도입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야기

-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선거 도입 등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헌법 4조 문제는 여야 협상에서 중요 의제로 취급되지 않았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a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이라는 표현은 87년 민주화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우리 헌법상 통일조항의 기본정신인 '평화통일' 정신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

22) 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검색일: 2024년 7월 4일).
23) 성기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편 방향: 주요 쟁점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3년 10월, p.7.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야 및 시민사회의 공감대라는 상징적 차원, 북한의 '민족' 개념 부인에 대응하는 대북전략적 차원에서 존치를 기반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신통일담론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 새로운 통일방안을 구상할 경우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의도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존재

- 현재 국회 내 여야 비율과 대통령 지지율 등 정치적 요소를 감안할 때 새로운 통일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통일방안이 탄생한다는 보장도 없음

- 신통일담론의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언론의 우호적 평가도 필요한 만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폐기나 대체로 비칠 만한 시나리오는 가급적 배제

- 신통일담론에서도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 내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확보해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 전제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구현이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기존 통일방안 골격 유지의 명분을 확보

ㅇ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되 북한의 무력통일 노선에 대응하는 평화통일 정책 추진 의지를 천명

- 기존 남북합의서를 부인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인도 하락, 국내 정치적 논란 유발, 향후 대북 협상력 저하 등 부정적 효과 예상

-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적 수준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기회를 확보해 우리의 남북합의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 단, 통일부의 남북회담 사료 공개를 계기로 1970년대 이후 시기별로 북한이 보여온 대남전략의 본질과, 협상 과정에서의 기만적 행태를 재조명해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분단 이후 남북협상 과정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객관적 재해석을 시도할 필요

-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제도 통일, 체제 전복 기도, 내정 간섭 등의 논리를 내세워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 존재

※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은 '제도통일 기도를 중단하라'며 반발한 사례가 있음

-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합의한 만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북한 체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할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 천명한대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흡수통일을 지지하거나 추진하지 않는다는 사실[24]을 신통일담론 발표와 동시에 재천명하는 방식도 고려

- 대한민국은 북한이 자유화와 민주화를 향한 의지를 표방할 경우 경제적 원조의 제공, 국제기구 가입 조력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

24) 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2022), pp.14-15..

※ 국제사회 대상 통일외교 과정에서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추진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번영의 토대였음을 강조하고 자유주의의 한반도 전역 확산을 위한 통일 지지를 호소

-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만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민관의 노력은 목표 대비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북한의 법률과 제도 개선보다 북한주민의 실질적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압박은 국제사회와의 연대, 탈북민 활동 간접 지원, 민간 중심의 대북 정보 유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

- 남북 간 기존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되 향후 남북합의 이행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25] 모니터링하며, 합의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기존 남북합의서 중 남북정상선언 등 정상회담 합의 문건은 통일 관련 조항을 포함해 남북한의 통일 지향 목표를 전제로 하여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적시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은 남북관계사에서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를 가장 구체적으로 접근시킨 것으로 평가

-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로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평화통일' 또는 '평화적 통일'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평화, 번영, 통일' 등을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채택 (<표1> 참조)

25) 도경옥·안형준, "남북합의의 이행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2021), pp.185-198.

<표2>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통일' 관련 조항

시기	합의문 명칭	평화통일 및 통일방안 관련 조항
1972.7.4	남북공동성명	(전문)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1조)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3조)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 제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
1991.12.13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중략)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
2000.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중략)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2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2007.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전문)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 (1조)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2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 ;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
2018.4.27	판문점선언	(전문)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 (1조)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 (3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
2018.9.19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

- 남북 정상선언문에서 ‘평화(적) 통일’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배제된 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선평화·후통일’ 방식으로 남북 협상전략을 구사한 결과로 해석[26)]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도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는 법리적 견해가 존재하는 바[27)], 이는 행위 주체의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범’으로서 대통령의 통일 부인 논리는 최소한 통일을 저해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취지를 둘러싼 논란을 제공

※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 4조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추상적, 포괄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은 평화통일을 배제하고 무력통일 가능성만을 시사함으로써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의 결과물에 포함된 ‘평화통일’ 조항의 정책적 유효성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이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흡수통일로 폄하하고 남북 합의서 상 ‘통일’과 ‘자주(적) 통일’ 조항을 한반도 유사시 북한식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들고 나올 가능성에도 유념할 필요

---

26) 성기영,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이후 대한민국 신통일담론의 모색,” p.6.
27) 이상훈·금창섭, “헌법상 통일 조항에 대한 법리적 고찰,”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2004) p.288-289.

- 신통일담론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의 무력통일 위협을 거부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제3장 신통일담론의 형식 및 주요 내용

가. 신통일담론 발표 형식

○ '담론(discourse)'은 논리적 체계를 갖춘 구상, 주장, 이론 등을 지칭하며, 논쟁이나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가능한 지식체계를 의미하는 만큼 국내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이 중요

- 통일을 정치적으로 정의(define), 또는 개념화(conceptualize)하거나, 통일과정을 제도화(institutionalize)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분단이 초래한 현실적 고통과 손에 잡히는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담론 전파 형식에 착안할 필요

※ 국내외 청중들에게 신통일담론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의 설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연설 방식에 의한 담론 전달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령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등 분단 고통의 희생자(통일의 수혜자)를 공동주체로 하는 메시지 전달 방식을 고려

○ 통일담론에는 통일의 이유, 통일의 지향점과 가치, 통일의 과정과 방식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며 궁극적으로는 통일국가의 이미지로 표출되어 나타남[28)]

- 통일담론은 당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과 조응하며

28) 강원택, 이광일, 홍석률, 이나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2021), p.3.

당대의 시대정신이 반영되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의 매체를 통해서 표출

- 통일담론이 전달되는 경로는 대통령부터 행정부처의 장, 여야 정치인, 정당 관계자, 학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연설, 인터뷰, 논문은 물론, 특정 개인이나 집단들 간 논쟁의 결과물을 담은 자료, 영상,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작성한 성명서와 영상물 등 다양한 방식을 망라[29)]

- 통일담론은 해당 시기의 주변정세, 안보환경, 대북정책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임

※ 예컨대, 권위주의 시대와 민주화 이후 시대 통일담론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며 민주화 이후에는 대북정책의 이념적 성격과 정파성에 따라 통일담론의 내용도 변화를 반복[30)]

o 기존의 통일담론은 일반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널리 유포되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경직되어 있거나 구체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

- '햇볕정책'이나 '통일대박론'처럼 대중들 사이에서 친숙하게 회자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통일담론이 있었으나 정권의 부침, 북한의 무관심 등에 따라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실패

- '선건설, 후통일'이나 '선평화, 후통일'과 같은 통일담론 또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통일 이후 중장기적 비전으로서 통일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통일담론으로서는 부족한 측면을 노출

29) 강원택, 이광일, 홍석률, 이나미, 앞의 책, p.4.
30) 강원택, 이광일, 홍석률, 이나미, 앞의 책, p.14.

o 성공적인 신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구성과 형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려가 필요

- 첫째, 전문적인 단어보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 필요하며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통일담론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

- 둘째, 통일대박과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모습이 개괄적으로라도 그려지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표현

- 셋째, 남북한주민 모두가 자유,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상태를 보장하는 방도이자 기회로서의 통일을 실감할 수 있는 희망적 단어를 포함

o 신통일담론의 지속적 생명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담론이 지향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동시에, 담론이 포괄하고자 하는 범주를 (패러다임/비전/전략/정책) 설정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

- 신통일담론은 기존 통일담론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restructuring), △새로 설계하는 (rebuilding) 한편, △ 형태를 바꾸는(remodelling) 요소들을 ①모두 포함하거나 ②선별적으로 1~3개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을 채택

o 한반도 통일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언', 또는 '구상 발표' 형태로 신통일담론에 담고, 남북한 정부(주민), 국제사회에 제안(호소)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발표 형식을 디자인

- 신통일담론은 '구상'과 '선언' 및 '제안'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대제목은 '구상' 또는 '선언', 소제목에는 '제안'을 담는 것이 타당

- 신통일담론에 따른 고도의 실천 전략과 로드맵을 기반으로 여야 정치권의 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한해 '방안' 명칭 부여 가능

※ 신통일담론 발표 형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

- (구상의 경우) 기존의 통일담론을 뛰어넘되, 점진적 보완을 전제로 하는 열린 구상으로서의 중장기적 통일담론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0' 등 새로운 네이밍을 시도하기에는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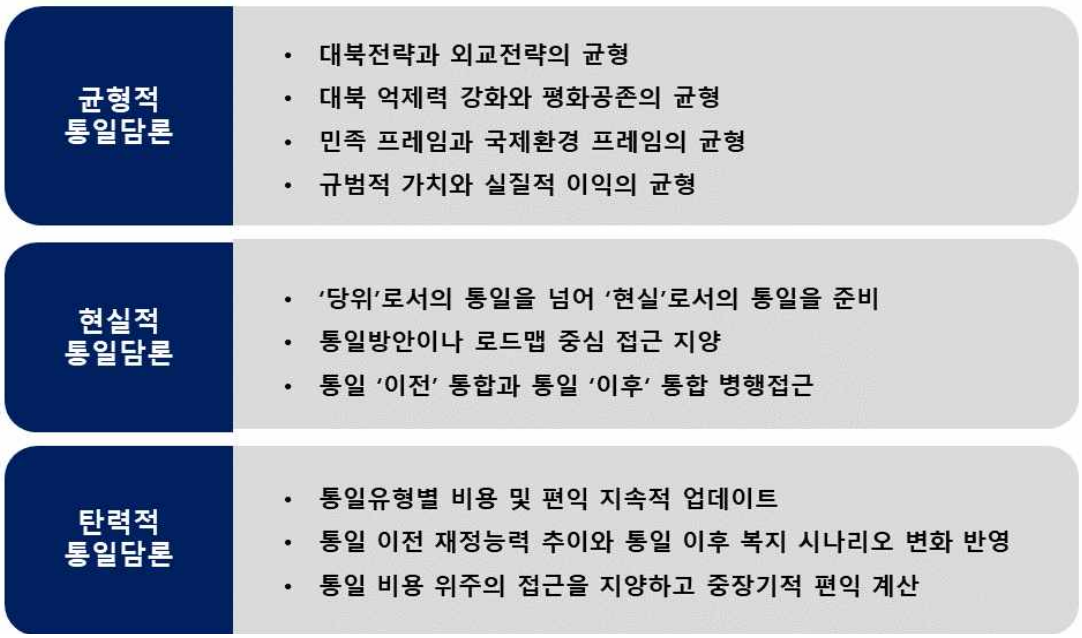
- (특별선언 또는 선언의 경우) 기존 통일담론의 전제와 방향, 통일전략 설계 방식 등을 변경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부적절

- **(발표 형식 사례)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위한 특별선언 ; 남북한과 국제사회에 제안합니다"**

나. 신통일담론의 주요 내용

(1) 신통일담론 수립 및 이행 원칙

<그림3> 신통일담론의 수립 및 이행 원칙



❶ 균형적 통일담론

ㅇ 통일담론 형성 과정에서의 '균형'은 양자 간 중간(middle ground), 중립(neutrality), 평형(balance)과는 달리 '통일환경의 역동적 변화에 부응하여 통일주체의 실질적 이익에 부합하는 기준점(reference point)을 견지하기 위한 양자의 최적 조합'으로 설정

- ① 대북전략과 외교전략의 균형, ② 군사력 증강을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와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공존의 균형 ③ 민족 중심 프레임과 국제환경 프레임의 균형 ④ 규범적 가치와 실질적 이익의 균형 등 4대 기준점을 바탕으로 신통일담론에 접근

- 협치의 실종, 의회정치의 정쟁화, 정치적 의사표현의 극단화 등 정

치권 및 시민사회의 양극화 국면에서 신통일담론이 범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방적 대북정책을 앞세운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벗어난 균형적 접근이 필수적

❷ 현실적 통일담론

○ 헌법상 영토의 회복과 비정상적 분단 구조의 청산이라는 '당위'로서의 통일에 머무르지 않고, 상반된 이념과 체제의 통합이라는 '현실'로서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집중

- 통일방안이나 로드맵 중심의 경직된 통일담론이 아닌, 통일을 위한 국내역량을 키워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북한 체제 변화의 결과로서 통일에도 '대비'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통일담론을 지향

- 단일국가 수립을 포함한 정치적 사건으로서의 통일과 남북한 각 분야의 실질적 통합을 동시에 사고하면서, '통일 이후의 통합'에 앞서 '통일 이전의 통합' 노력을 병행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통일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제고

❸ 탄력적 통일담론

○ 통일의 유형별로 통일 이후 발생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익과 통일준비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투입 비용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지속적 업데이트를 통해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탄력성 유지

- 북한의 시장화 및 사적 경제 발전 동향, 한국의 재정능력 추이, 출생률과 고령화 수준, 통일 이후 국민 복지 시나리오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응력을 가진(adaptive)' 통일담론을 모색

- 통일비용 위주의 접근을 지양하고 보편가치의 확산과 통일편익을

강조하되 중장기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편익 계산을 통해 통일이 한국사회가 직면하게 될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라는 점을 강조

(2) 신통일담론 주요 내용

(가) 통일의 목표

"남북한 주민이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번영을 위해 도약하는 선도적 통일국가의 실현"

<그림4> 신통일담론의 목표 및 핵심요소



○ 남북한주민 모두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통일의 이유이자 목표로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

- 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② 경제적 선택권 박탈 상태의 해소 ③ 이념과 사상을 탄압하는 제도의 철폐 등을 통해 남북한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자유롭게 사고하며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보장

- 남북을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의 철폐를 통해 남북한주민 모두가 한반도 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

-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자신과 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

-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에서 분단 상황의 지속이 야기한 자유의 유예 상태를 해소

-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 하에서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경제적·사상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억압해온 인권범죄 수집과 기록을 통해 통일 이후 해당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김

-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 시스템이 대한민국 번영의 원천을 제공했듯이 자유민주주의의 한반도 전역 확산이 통일 이후의 공동번영을 보장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북한주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

- '법에 의한 지배' 원칙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한 자유의 억압과 제한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자유의 충돌이 야기하는 분쟁도 공정한 사법체계의 확립을 통해 해결

-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분립 시스템을 구축하고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

-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최고 지도자와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참여권을 행사

- 남북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하여 상대방 방송 시청, 상대 지역 방문을 통한 문화 컨텐츠 제작 등을 제안

ㅇ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을 제고

- 북한의 핵공격 위협과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적 공조를 바탕으로 실효적 억제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고, 비핵화 단계와 비핵화 이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패키지를 마련하여 국제사회를 설득

-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도출시 단계별 진전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별 대응조치 시행

-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연계하여 재래식 무기와 군비경쟁의 축소를 위해 9.19 남북합의의 효력정지를 해소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

- ‘남북관계=교전국 관계’를 선언한 북한이 남북한 국경선 선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탈하는 기습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도발 감행시 적극적 대응 및 응징 보복 조치 시행

-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한반도에 존재하는 어떠한 정부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무력 사용과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함로써 자유와 평화의 상관관계를 강조

- 국민의 인명 손실과 세금 인상 등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력 사용과 군사력의 동원에 반대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가 갖춰진다면 1인 독재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침공이나 군사적 개입

등에 대한 통제 가능[31)]

-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무력 사용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음

- 복수정당의 경쟁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가능한 정치체제가 한반도 전역에 확산될 경우 남북 간 대치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마련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북한의 한반도 유사시 '영토 완정' 등 무력통일 논리에 맞서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정책 추진을 시종일관 강조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규범적 우월성을 확보

- 헌법 66조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가 규정하는 정신과 가치에 따라 한반도에서 지속적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바탕위에서 통일정책을 추진

○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경제적 자원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허브로 부상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

-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주민들의 민생 개선을 위한 농업, 식수, 보건, 의료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기후변화 위기로 인한 기상재해와 농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을 제안

- 북한 지역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남한 기업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모색

- 북한 지역 제조업 인프라와 노동력 운용 시스템이 통일의 충격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남북한 자유왕래를 제

31) 김인한 외,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연구," (2023 통일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제사회연구원, 2023년 12월, pp..107-111.

한하는 방안도 검토

- 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축과 작동을 위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이익이 배분되는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

-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

- 한반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향하는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성

- 동북아 물류 시스템 개편을 통해 통일 한반도 전체가 유라시아 물류 통로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북한의 항만 및 공항 현대화 추진

- 한반도 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연구, 분석, 중국과 러시아 등 현장조사, 도상연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통일 이후 체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

ㅇ 통일국가의 완성은 한국이 중견국이나 강소국 정체성을 뛰어넘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

- ‘선도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발전과 진보의 모범규준과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국가를 의미[32)]

- 선도국이 제공하는 모범규준과 국제기준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어떠한 대가나 비용을 치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권국이 제공하는 공공재와는 차별성을 가짐

32) 이왕휘·김남국, “세계 “선도국가‘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30권 4호 (2021년 겨울), p.263.

- 선진국과 강대국 등 한국의 미래 정체성 목표나 강소국과 중견국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지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범국가의 탄생을 의미

-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의무를 갖는 '룰테이커(rule-taker)'에서 국제기준을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룰메이커(rule-maker)'로의 지위 상승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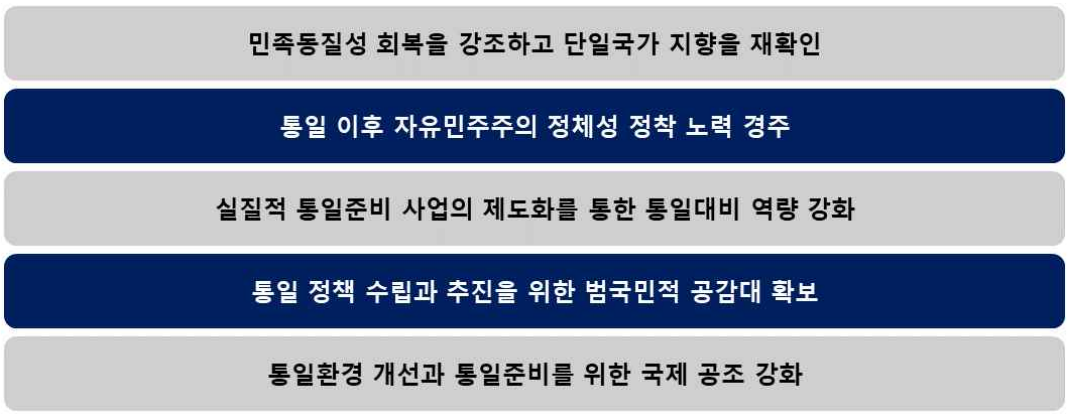
- 패권국과 강대국은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존중 의지가 부족하지만 선도국은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

- 전쟁의 참화와 대량 인명 살상을 동반하지 않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에 체제통합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규범세력 (normative power)' 이미지에 바탕한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

- 한반도 통일을 통한 선도국 부상은 중장기적 통일준비를 통해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일의 편익이 남북한주민 모두와 국제사회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에만 가능

(나) 신통일담론 기반 통일정책 추진 방향

<그림5> 신통일담론 기반 통일정책 추진 방향



○ 민족동질성 회복을 강조하고 단일국가 지향을 재확인

- 남북한주민이 공유해온 언어와 역사, 문화의 동질성을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강조함으로써 한국 주도 통일의 당위성을 확보

- 민족 동질성의 강조는 종족적(ethnic) 민족 개념의 강조나 저항적 민족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분단 장기화가 낳은 한민족 정체성의 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반역사적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

- 한반도 통일은 종족적 민족 개념의 고수냐 해체냐의 이분법적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 구성원들의 결합이라는 미래기획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33)]

- 김정은의 '2개 국가론' 선포와 '민족' 개념 부인을 계기로 남북관계 단절 장기화가 가져온 통일담론의 위축을 반전시켜 신통일담론 확산의 계기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

33) 조정아 외,『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Ⅳ(2)』(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416-418.

- 북한의 반민족적 통일노선 전환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를 복원해야 한다는 역사적, 도덕적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부각

- 북한의 ‘2개 국가론’ 선전을 한반도 분단의 배경, 전쟁 이후 남북한의 발전 경로,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 북한의 인권 현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공공외교의 계기로 활용

- 국내외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북한의 기근과 공포통치로부터 탈출한 탈북민,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한국전쟁 포로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관심을 제고

- 다문화 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문화적 토양 속에서도 한민족이 공유해온 정체성과 문화, 역사에 대한 소재 발굴과 홍보를 통해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가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강조

- K-컬처와 K-콘텐츠에 우호적인 세계 각국의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남북한의 분단 과정과 남북관계사,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의 존재, 대한민국의 통일 노력 등을 알릴 수 있는 문화 이벤트 기획

o 통일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정착 노력 경주

-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은 개별적 분단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들 중 ① 어느 하나가 승계되는지 ② 두 개의 가치들이 절충, 융합되는지 ③ 제3의 가치가 창출되는지에 따라 결정

-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어떠한 정체성이 부합하는지와 지역 안보공동체 형성 여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34)]

- 북한의 수령독재 체제 고착화와 김정은 집권 이후 정보통제의 심화 및 개인 우상화 정책은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및 정치형태와 관련하여 남북한 절충형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 우위 현상을 재촉

- 미국 정치질서의 혼란과 유럽 내 극우 민족주의의 득세 등 자유민주주의의 일부 교란 및 후퇴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성을 회복하는 과제를 상기시켜주고 있음

-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탄생시킨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보완하는 자유민주주의 2.0을 북한주민들에게까지 확장한다는 인식 필요

-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전방위 경쟁구도의 출현, 러시아발 냉전 질서의 부활 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경합 구도로 발전

- 한반도 주변 환경의 신냉전화는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에서도 정치적 다원성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수령제 기반 권위주의 독재체제의 대립 구도를 촉진

- 통일 이후 남북한 제도의 통합은 제도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와 규범의 존재 속에서만 실행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 지역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요소[35)]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한 대한민국 통일담론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민주주의를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준비 작업이 필수적 요인으로 부상

---

34)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42-43.

35) 박종철 외, 앞의 책, pp.174-182.

-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형성은 통일 이후 체제통합 단계에서 수행해야할 과제가 아니라 통일 이전 통합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

- 자유민주주의가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으로 이식되고 착근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통일 준비과정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함으로써 통일친화적 사회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필수적

- 북한주민들에게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고, 자신들에게 통일조국 건설의 사명감과 역할을 부여하는 '기회의 창'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

- 김정은 체제의 1인 수령독재와 개인 우상화 유지를 위한 각종 사상교양과 정치행사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 동원에 따른 물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과정에서도 당군 고위급 엘리트, 해외 근무자, 일반 주민, 청년 세대 등이 처한 상황과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컨텐츠 구성이 중요

※ 북한주민의 80%는 이미 한류를 비롯한 외부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단순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텐츠보다는 한반도의 미래와 자신들의 삶을 중첩시킬 수 있는 상상력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

- 북한의 청년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성장·번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동경하면서 통일조국과 자신들의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

ㅇ 실질적 통일준비 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통일대비 역량 강화[36]

- 신통일담론은 북한의 변화로부터 촉발되는 통일에 대비하는 한편, 남북관계 활성화에 따라 형성되는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통일준비를 동시에 반영

- 통일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의 조성을 촉진하는 '다가가는 통일'을 지향

- 통일준비 사업은 국내적 준비, 남북관계 차원의 준비, 국제적 환경 조성을 통한 준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신통일담론 형성 과정에서 국내적 준비에 초점

-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비한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을 구비하는 것을 국내적 통일준비의 핵심요소로 설정

- 통일에 결정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거나 통일의 시점이 다가왔을 때 주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여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전문성이 중요[37]

- 통일회의론의 확산을 극복하고 통일만능론을 경계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장기적 통일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체계를 마련

- 신통일담론을 국내외의 통일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계기이자 분단 100년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선포 모멘텀으로 활용

- 통일이 한국과 북한 사회의 주요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만능키라는 인식론적 오류는 경계

36)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 백서』, pp.16-17.
37) 김수암 외,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22.

- 탈북민 사회통합과 남북한 체제통합을 통일의 지속적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미래 특정 시기의 '정치적 사건'에 국한된 통일 인식의 비현실성을 극복

-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이 원하는 탈규범적 방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무리한 주장과 무관심에 의한 교류협력의 일시적 단절을 남북관계 악화로 낙인찍는 정책적 관행도 지양

※ 북한의 불합리한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단순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규범에 입각하여 남북관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발전'을 도모

-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반영하는 남북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준비 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식

- '평화통일기반구축법' 등 통일준비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 통일역량 진단체계를 갖추는 한편, 중앙부처별·지자체별 담당관 신설 등 행정조치 시행

○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

- 한반도 통일은 정파와 진영의 이익을 초월한 범국민적 염원인 동시에 민족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미래를 좌우

- 남북한 통일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을 포함한 비약적 국력 신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

- 통일담론의 내용과 통일정책 방향을 둘러싼 진보-보수세력 및 정파

간 남남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민족공동체의 건승과 대한민국이 국제질서의 선도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기회로서의 통일 성취는 요원

-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도 상실

- 범국민적 통일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다양성과 전문성 및 행정기관의 정보력과 집행력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38)]

-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담론 형성을 통해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설계하고, 통일준비와 통합을 위한 실행력 높은 정책과제 발굴 필요

-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과 정부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연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 언론과의 소통 채널, 교육계와의 협조 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통일담론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교육 현장에서 배양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남북교류 중단 상태 고착화, 북한 체제의 탈규범적 행동과 폐쇄적 성격 강화 등으로 인해 세대 간 통일인식 차이도 뚜렷해지는 추세

- 통일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세대 간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젊은 세대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대 간 통일인식 차이 극복을 위한 노력 경주

38)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백서』, p.23-25.

- 국내외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구성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탈북민 정책 발굴

ㅇ 통일환경 개선과 통일준비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주민 모두에게 자유, 인권, 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규범의 확산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

-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점을 부각

- 북한의 핵국가화, 중러북 연대 추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양극화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에만 의지하는 통일 시나리오의 현실 가능성은 축소

- 한반도 주변 질서 형성과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동의하는 통일 시나리오가 중요

- 한반도 통일의 형태와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 4국의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는 한 통일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들의 반발이 지속될 경우 역내 질서의 불안정으로 인해 통일한국의 성장과 번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자유민주주의의 한반도 확산을 통한 통일 시나리오에 우방국을 포함해 최대 다수의 국가들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

- 신통일담론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캠프데이비드 합의 수준의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나 진일보한 입장이 나올지는 불명확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2개 국가론’ 지지 입장을 선언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미일 3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인도 등 주요 선진국 및 중견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중국과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진영 국가들이 북한의 ‘2개 국가론’에 동조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외교 경주

제4장 신통일담론에 따른 구체적 정책방향 및 사업 제안

가. 신통일담론 확산을 위한 민관 공동 노력 경주

(1) 정책방향

o 정부 각 부처와 국회, 통일 관련 시민단체 등을 연계하는 통일 플랫폼을 상설화하여 신통일담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고 공감대를 확산

o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모색, 통일국가의 청사진과 비전 제시로 신통일담론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

(2) 사업

o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가칭)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 (가칭) 통일준비위원회는 탈북민 단체를 포함하는 통일 유관 단체와 전문가, 정부 각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민관연 거버넌스 조직

을 기반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칭) 통일준비지원법을 제정

- (가칭) 통일준비위원회에 신통일담론 배경 및 대북통일정책 영향에 대한 대내외 홍보, 부처별 통일준비 업무추진체계 설계 및 이행 실적 점검, 해외 통일공공외교 총괄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 (가칭) 통일준비지원법 제정시 국회에서 3~5년 단위로 통일준비 기본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이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과 법령이 통일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통일준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

○ 통일논의의 정파성을 극복하고 신통일담론의 범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통일 관련 예산 증액 추진

- 22대 국회 임기 내 통일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목표로 신통일담론에 대한 대국회 설명과 협조체제를 강화

- 여야 출신 前職 국회의장을 공동대표로, 초당파적 성격을 갖는 (가칭) 통일미래포럼을 구성해 전현직 정치인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내 통일특위 구성을 위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

- 민주평통 등 헌법기구, 통일교육협의회 등 풀뿌리 통일 관련 조직 운영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대국민 설명 플랫폼 활성화 (예, 격월간지 <평화통일>의 월간 발행)

ㅇ 통일 이전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를 통해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통일 이후의 청사진을 국민들과 공유

- 통일을 통한 남북한 통합이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생, 저성장의 실존적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라는 사실을 강조

- 정치 및 행정체계, 헌법, 경제 및 금융 시스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체계, 농어업 관리체계, 사법제도, 교육제도 등 각 분야 남북통합 연구과제 결과물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 통일 '이전' 및 통일 '이후' 남북통합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 통일 시나리오의 보안등급 재검토

※ 실질적 통일준비에 필요한 정책자원을 국내외에 제공하고 현실적용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를 국민들과 공유

나.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과 민생 개선을 위한 노력

(1) 정책방향

ㅇ 북한주민의 인권 및 민생 개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위한 시금석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통일준비의 핵심으로 설정

ㅇ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방국 및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정부가 대북 경제원조 및 개발협력을 주도

(2) 사업

ㅇ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책무를 강조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

- 국내외 통일 관련 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후원을 확대하고 북한인권 해외 행사 개최시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한 편의를 제공

- 북한주민의 정치적 자유권과 경제적 생존권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의 1.5 트랙 협의체를 창설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인권중시 외교 경험이 많은 영국, 독일 등 유럽 내 북한 수교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스웨덴, 핀란드 등 중재외교를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

-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관련 논의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간접적으로 지원

- 동맹국 미국의 오토 웜비어 사건, 우방국 일본의 납치자 문제 등 북한인권 관련 해외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보편성을 강조

-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억류자 등 당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시간적 촉박성을 다투는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 방식을 고려

o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적 차원의 협력사업을 병행

-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수준 향상을 위해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 국제적십자(ICRC, IFRC),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식량기구(FAO) 등 북한 내 활동 국제기구에 대한 공여를 확대하고 상시적 정책협력을 강화

-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대상 개발협력 경험을 가진 한국인 전문가들과의 협업체제를 통해 북한의 현실에 맞는 내외국인 개발협력 전문가를 육성

- 국제기구 및 단체들을 통해 민생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의류품들을 북한 전역에 지급하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친한 의식을 확산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

다. 개방과 소통을 통한 남북대화 추진

(1) 정책방향

ㅇ 남북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군사적, 인도적 위기 발생시 리스크 관리에 주력

ㅇ 남북합의를 존중하고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범 준수와 상호성 원칙에 근거한 남북교류를 추진

(2) 사업

ㅇ 남북 간 대화 단절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하고 대화 창구를 복원

- 자연재난 요인에 따른 인도적 조치, 우발적 군사충돌 발생시 확전방지 등을 위한 연락 채널의 복원을 북한측에 요구

- 유엔인권이사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연맹(IFRC), 유니세프(UNICEF),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남북한이 동시 참여하는 국제기구 총회 등을 계기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남북관계 복원 필요성 강조

-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 중재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외교 과정에서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을 강조하고 대화 채널 복원 필요성을 설득

- 남북관계의 질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법률적 조치 시행

-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남북관계 단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국내외에 지속적으로 발신

ㅇ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기반 조성과 현안 발굴 노력 강화

- 신통일담론 발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규정대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민족 내부 거래' 방식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관계 단절 상태의 극복과 교류 재개가 바람직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개성공단 무단 가동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을 강화

- 농업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북한 주민을 위한 민생 현안, 기후 변화 대응과 삼림 황폐화 방지 등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 재개를 위한 대화 제의

ㅇ 남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소통 노

력 경주

- 언론, 방송, 출판, 학술 등 지식정보 분야 남북교류를 통해 동질성 회복 노력을 경주하고, 공통의 언어,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도록 유도

- '북한 바로 알기' 차원에서 등 북한 생산 컨텐츠와 미디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

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속적 개발

(1) 정책방향

ㅇ 통일준비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북한 주민들과도 통일 이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ㅇ 탈북민 국내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보완

(2) 사업

ㅇ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 내 자유민주주의 확산,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작업 준비 등을 위해 국내외 거주 탈북민들의 역할 제고

- '북한이탈주민의 날' 취지 및 각종 기념행사 내용이 중북 국경 지역과 한국 위성TV 시청이 가능한 군사분계선 지역을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 탈북민들의 북한 내 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유관분야 재교육을 활성화하여 공직 임용 기회를 확대

- 통일부 및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 하나원, 북한인권기록센터), 민주평통 등 통일업무 관련 공직에 탈북민 출신 임용시 인센티브 부여

- 민주평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일 개척자'로서 탈북민들의 통일 염원을 해외에 전파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

ㅇ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정착지원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여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만족도를 제고

-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에서 청년 탈북민 채용시 특별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미래세대가 통일준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90년대 중반 급증한 탈북민들의 현재 연령대를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노후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

- 저학력 여성 탈북민들의 양육 지원과 학력 증진 사업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직능별 전문성을 가진 국내 정착 탈북민들에 대한 국비 지원 재교육을 활성화하고 남북한 산업 및 기술체계 비교를 통한 통일준비 사업에 적극 활용

마.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

(1) 정책방향

ㅇ 정부 차원의 통일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민간 통일교육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ㅇ 통일교육의 초점을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통일준비에 두고 정치,

경제, 산업, 복지, 사회통합 등 분야별 통일전문가를 육성

(2) 사업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범부처별 통일준비 사업 기반을 조성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내에 통일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과장, 국장 승진자를 대상으로 통일준비 사업에 대한 의식 함양

- 베트남, 몽골 등 해외공무원 위탁과정에도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우리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소개

- 공공기관 통일교육 의무 시수를 확대하고 하위 직급자 위주의 수강 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기관장 직접 참석 유도 방안을 강구

- 통일준비 사업의 복합성을 고려해 각 부처별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융합적 관점의 커리큘럼을 개발

ㅇ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기반 확대를 위해 전국 통일관 등 전시 및 체험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

-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 4개소, 경기도 2개소(오두산, 고양) 강원도 2개소(고성, 양구) 등 전국 13개소에 통일관 운영

- 통일관 소재지는 학교 구내(서울), 공원(인천·대전·광주·고양), 어린이용 시설(청주) 등 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접근성보다는 설치 편의성을 고려했음

- 인구 및 통일교육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일반시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4개소의 통일관을

추가 설치하거나 지정

- 전쟁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서울 소재 주요시설 내 일부를 통일관 또는 통일 관련 전시 시설로 지정,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 전국 13개소 통일관 중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성 통일전망타워의 무료화를 위한 예산 대책 확보

ㅇ 통일교육협의회 72개 회원단체들의 교육 내용과 방식을 업그레이드하여 수요자층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선

-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맞는 통일교육은 문화적 코드를 활용해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

- 소셜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2030세대의 정보 획득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메타버스(ZEP) 등 비대면 기술을 최대한 활용

바.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1) 정책방향

ㅇ 신통일담론 발표 이후 양자 및 다자외교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의지에 대한 지지 유도

ㅇ 중국과 러시아, 구소련 국가들이 북한의 ‘2개 국가론’을 지지하고 한반도 통일논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도록 하는 양자외교 강화

(2) 사업

ㅇ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환경을 조성

- 북한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해외 통일외교 사업 기획

-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데 국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문화외교, 지식외교, 정책 공공외교의 다양한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복합적 구성물로서 통일외교 컨텐츠를 재구성

- 자유, 인권, 법치, 빈곤 퇴치, 생태, 환경 등 평화통일 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면서 북한 이슈를 포섭할 수 있는 분야를 통일외교 컨텐츠의 핵심과제로 설정

- 현재 미중일러 및 독일 등 5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 공관 통일안보관을 증원하여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와 유엔대표부, 유럽연합, 아세안 등을 상대로 통일외교 기반 구축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진흥사업’과 연계하여 해외 한국학 거점대학의 한국학 교원임용이나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에 통일 분야 전문가와 통일 관련 커리큘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

- 국제교류재단(KF)이 시행하는 ‘해외 한국학 강좌’에 △이산가족 △남북한 언어 및 문화 비교 △남북관계의 현주소와 통일을 위한 노력 등 통일 관련 강좌 설치를 의무화

- 국립통일교육원 시행 ‘글로벌 통일교육’ 대상을 해외 전문가, 신진학자, 주한 유학생에서 전현직 외교관과 국회의원, 유엔 산하 국제기구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연수 인원 증원, 예산 증액 조치 등을 시행

-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포럼(KGF)’의 명칭을 ‘한반도통일국제포럼(Korean Unification Global Forum)’ 으로 변경하고 매년 통일 관련 세션 운영을 정례화

-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통일 경험 국가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등 영토 변경 협정 체결 국가 △코소보, 쿠르드족 등 민족 분쟁 국가들의 사례를 재조명함으로써 북한의 ‘2개 국가론’과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고 남북한 주민의 화해와 상생을 지지하는 국제 여론 조성 노력 경주

- 국내 대학 및 연구소, 기업, NGO, 개인 등이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의 공공기관, 싱크탱크,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 및 컨텐츠 제공 등 정부의 지원을 강화

- K-컬처와 K-컨텐츠, K-푸드 등 한국의 소프트파워 자산과 DMZ, 강화, 철원, 고성 등 한국전쟁 관련 현장을 결합하는 방문형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분단 현실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

- 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등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희생자들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 컨텐츠 생산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를 개최

- 전직 외교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인, 해외 유력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리의 통일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초청행사를 기획하고 행사 이후에도 ‘한반도 통일포럼’ 등을 조직해 정기적 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o 신통일담론 발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계기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동맹 및 우방국들의 지지가 공동성

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 경주

- 미국, 영국, 일본, EU, 호주, 캐나다 등 전통적 우방들이 대한민국 통일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대상국 주재 공관의 외교 역량 결집

-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아시아와 남미의 선도국가들로부터 한반도 통일 지지 확보 노력 경주

- 북한이 영토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공식화할 경우 '2개 국가론'에 대한 배경과 의도 분석을 기반으로 이러한 주장이 갖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성격에 대한 해설자료를 현지어로 작성해 배포

- 특히, 중국의 대만정책(One China)과 대비해 '통일국가(Unified Korea)'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 경주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반도 주변 국제질서 변화 움직임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하여 신통일담론 기반 통일외교를 준비

- 민주당 재집권시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를 포괄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와 미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협상 의사 △제2차 우크라이나 평화회의(11월) △미국과 중국의 중재 등으로 인해 미국 대선 시기를 전후하여 본격적 종전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개연성도 존재

-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교전 중단은 대러시아 무기 지원을 댓가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기술 지원을 약속받았던 북한의 효용가치를 떨

어뜨리고 러북관계의 친밀도를 이완시키는 결과로 작용

-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우크라이나 종전, 나토동맹의 재구성,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국제 및 지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며 북한과의 직접 외교 재개 가능성도 예고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재개되고 핵동결과 군축 협상 등으로 '빅딜'이 진행될 경우 신통일담론의 입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집권 대비 '플랜B' 검토 필요

- 미북정상회담 개최 시 북한의 '2개 국가론'과 통일 부인 문제를 의제화하도록 한미관계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 일련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은 단기간의 정책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이라는 사실을 강조

o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 주도 국제기구에 북한의 가입 가능성에 대비

- 러북 신조약은 2000년 친선·선린 협조 조약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지지'와, 1961년 '우호·협조·원조 조약'의 '평화적이며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의 통일 실현' 등 통일 관련 언급을 배제

- 북한의 '2개 국가론'과 통일 부인 입장을 러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러시아가 전면 수용한 결과로 해석 가능

- 러시아는 세력권의 부활과 다극체제의 실현이라는 대전략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하이협력기구

(SCO), 브릭스(BRICS), 구소련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등 러시아 주도 국제협력체에 북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

- 러북 신조약(제7조)은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고 선언

- 북한도 러북 신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북한과의 3자 협력을 주장한 벨라루스와의 외교를 강화하고 <노동신문>에 BRICS 지지 기사를 게재하는 등 사전 분위기를 조성

- 북한이 러시아 주도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한반도의 신냉전 구도는 강화되고 신통일담론이 지향하는 통일미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 SCO, BRICS, CSTO 등 해당 국제기구 회원국들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2개 국가론’의 배경과 의도를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

- 러시아가 북한의 ‘두 국가’ 주장에 편승해 ‘한민족의 자주성’을 배제하고 통일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 필요

참고문헌

강원택·이광일·홍석률·이나미, 『분단 이후 제기된 통일담론에 대한 정리와 성찰』 (서울: 통일교육원, 2021).

고유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통일인문학』 제60집 (2014.12), pp.259-273.

김계동,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 대북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 명인문화사, 2023).

김계화, “우크라전 서방 압박에도... 작년 중러 군사훈련 20년 사이 최다,”『연합뉴스』 2023년 7월 17일.

김상범·김종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pp.168-176.

김수암 외,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6).

김인한 외, “자유민주주의 통일 담론 연구,” (2023 통일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경제사회연구원, 2023년 12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준비 백서』 2017.

도경옥·안형준, “남북합의의 이행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홍익법학』 제22권 제3호 (2021).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5).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와 통일 1』, pp.174-182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성기영,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2년 9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편 방향: 주요 쟁점과 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3년 10월.

———,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이후 대한민국 신통일담론의 모색,”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전략보고」 2024년 6월.

신규진·신나리, “[단독] ”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한미일 밀착엔 경고메시지,“ 『동아일보』, 2023년 9월 5일.

신규진, “[단독] ”‘노동당 10국’으로 이름 바뀐 통전부 북 내부선 ‘대적지도국’ 노골적 별칭” 『동아일보』 2024년 5월 24일,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제23권 2호, 2022년.

이상신·민태은·윤광일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이상훈·금창섭, “헌법상 통일 조항에 대한 법리적 고찰,” 남북법제개선연구보고서 (2004).

이왕휘·김남국, “세계 “선도국가‘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30권 4호 (2021년 겨울).

이제훈, “[단독] 북, 76년 지켜온 ‘남한 혁명통일론’ 사실상 폐기,”『한겨레』 2021년 7월 1일.

정성윤, “3.1절 105주년 기념사의 평가와 후속 조치,” 통일정책포럼 발표문 (서울, 통일연구원, 2024년 3월 20일).

정승호·조용신·김규철, “반이민 정서 모형을 이용한 부정적 통일의식 분석,”『통일과 평화』, 제14권 제2호, 2022년.

조정아 외,『통일교육 컨텐츠 개발 Ⅳ(2)』(서울: 통일연구원, 2014).

조한범, “새로운 통일 비전 배경과 추진 전략,” 통일정책포럼 발표자료집 (서울, 통일연구원, 2024년 3월 20일).

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검색일: 2024년 7월 4일).

통일부,『통일백서』(서울: 통일부, 1995).

통일부,『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서울: 통일부, 2022년).

홍민 외,『구술로 본 통일정책사』(서울: 통일연구원, 2017).